

229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17. 5. 8



—

서울시 자치구의 복지재정 실태분석과 정책제언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울시 자치구의 복지재정 실태분석과 정책제언

	요약	3
I.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동향	4
II.	서울시 자치구의 복지재정 실태	8
III.	서울시 자치구의 복지재정 특성과 유형	11
IV.	정책제언	19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241
francies@si.re.kr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사회복지재정 부담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는 데다가 국고보조율까지 다른 지역보다 낮아 사회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부담이 크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 사회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는 복지 재정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복지재정 지출증가와 국고보조율 차등적용으로 서울시에 재정위기 자치구가 속출

서울시와 자치구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총세출에 비해 사회복지지출이 3~4배 가량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본청보다 자치구 증가 추세가 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자치구 내에서도 사회복지지출의 증가속도 차이가 심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치구 간 사회복지지출 규모의 격차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재정력이 좋다는 이유로 국고보조율을 차등 적용받고 있지만, 실제 재정 상황을 살펴보면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복지지출 급증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치구가 많지 않다.

서울시 자치구의 거의 절반이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지출 확대로 재정압박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복지재정 특성을 위험도·증가도·압박도·자율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다시 복지수요·재정능력·지출자율성에 따라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높은수요·재정열악·의무지출형’의 특성을 지닌 지역은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등 무려 11개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비교적 사회복지 대상자 수가 많고 국고보조사업 비중도 높지만, 재정능력은 열악한 특성을 보인다. 급증하는 사회복지지출로 인한 재정 위험 및 재정압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재정문제,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해법 찾아야

사회복지와 관련된 재정문제는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 다른 분야의 세입-세출 간 구조 속에서 파악하고 접근해야만 해법 모색이 가능하다.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우선적 책임과 비전을 제시해주어야 하나, 서울시와 자치구 차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재정 책임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의 적정화(특히 서울시의 국고보조율 인상)’, ‘서울시 재정분석제도 도입으로 복지재정 감시시스템 마련’ 등이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I.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동향

사회복지지출 급증세 ‘지방재정 빨간불’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은 7년간 2배 이상 늘어나

- 중앙정부 사회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은 더욱 빠른 증가
- 2008~2015년 중앙정부의 총지출이 257.1조 원에서 375조 원으로 연평균 5.6%씩 증가하는 사이 사회복지지출은 67.6조 원에서 115.7조 원으로 연평균 8%씩 증가
- 같은 기간 지방정부의 총지출이 161.2조 원에서 234조 원으로 연평균 5.5%씩 증가하는 사이 사회복지지출은 36.5조 원에서 76.6조 원으로 연평균 11.2%씩, 7년간 2배 이상 증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총지출에 견줘 사회복지지출이 더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더욱 심각

표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총지출 및 사회복지지출 추이와 비중

(단위: 조 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감률
중앙 정부	총지출	257.1	284.5	292.8	309	325.4	341.9	355.8	375.4	5.6
	사회복지지출	67.6	74.7	81.2	86.4	92.7	97.4	106.4	115.7	8.0
	비중	26.3	26.3	27.7	28	28.5	28.5	29.9	30.8	
지방 정부	총지출	161.2	178.1	183.2	185.5	198.9	208.9	220.3	234	5.5
	사회복지지출	36.5	40.6	45	47.9	51.9	59.2	69	76.6	11.2
	비중	22.6	22.8	24.6	25.8	26.1	28.3	31.3	32.7	

주 1. 총지출은 본예산(당초예산) 기준, 총계기준

주 2. 중앙정부 총지출은 예산+기금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개요

- 사회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은 지방정부가 더욱 크게 나타나
 - 2008년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6.3%로 지방정부의 22.6%보다 높았지만, 2015년에는 중앙정부(30.8%)보다 지방정부(32.7%)가 더 많은 지출을 기록
 -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서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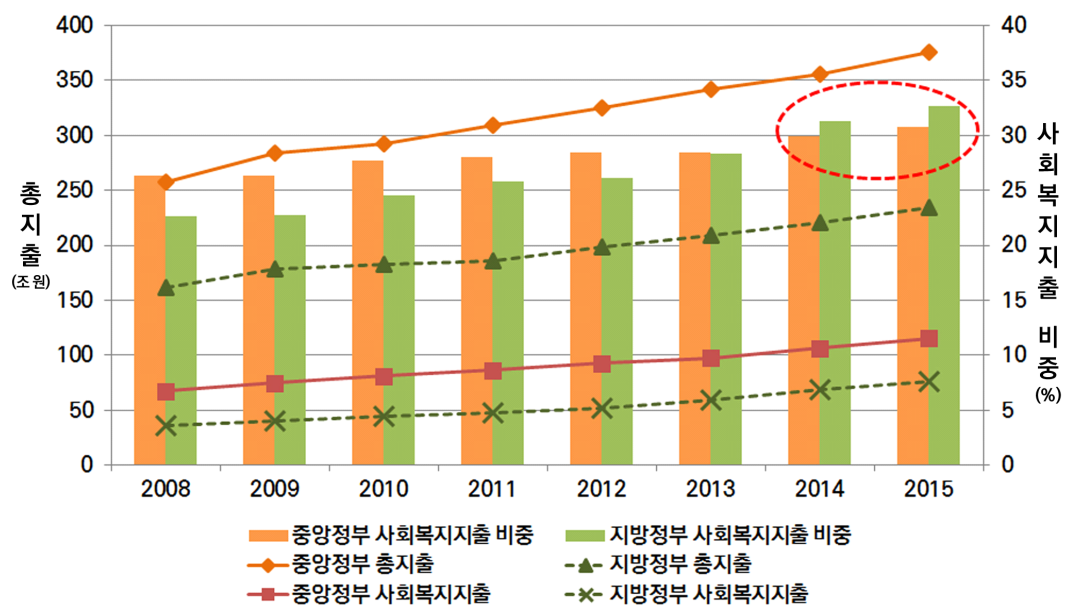


그림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총지출 및 사회복지지출 변화(2008~2015년)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개요

국고보조사업이 사회복지지출 증가 견인, 복지재정 부담 원인

국고보조사업이 사회복지지출의 대부분을 차지

- 2014년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중 정책사업비의 총규모는 145.7조 원으로, 보조사업비 78조 원(53.7%)과 자체사업비 67조 원(46.3%)으로 구성
- 사회복지사업 중 91.9%가 국고보조사업이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출하는 자체 복지사업 비율은 8.1%에 불과
- 지방정부의 전체 국고보조사업 중 사회복지사업이 49.1%나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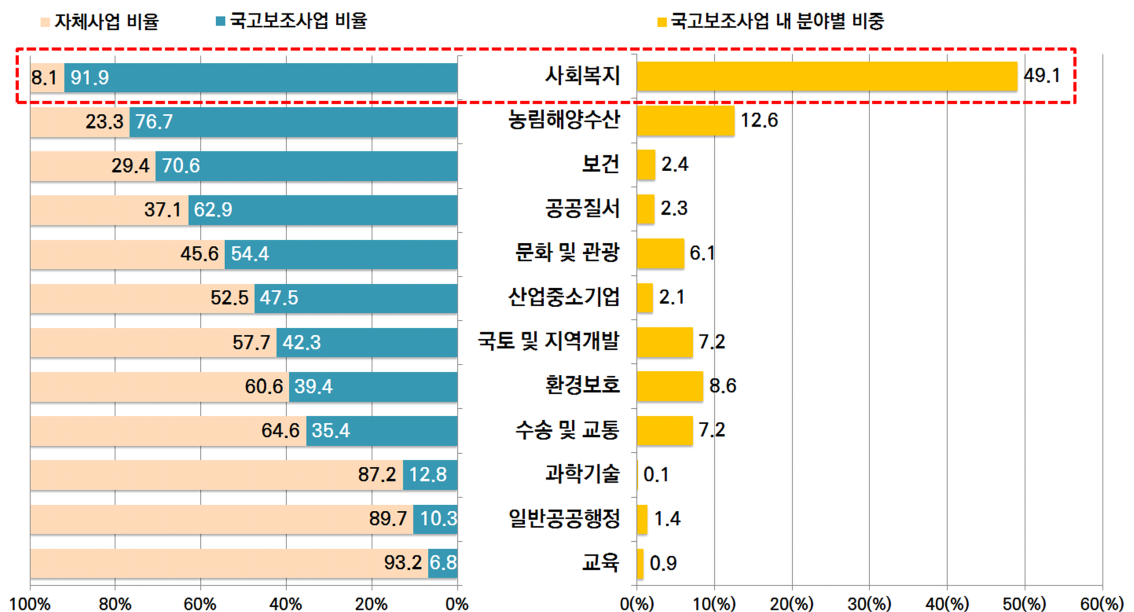


그림 2. 전국 지방정부의 분야별 정책사업 구성비(2014년 기준)

자료: 2015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하)

국고보조사업비의 지출 부담은 정부보다 서울시가 더 많이 늘어나

-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보육료지원과 같은 국고보조사업은 정부가 정한 사업이지만 예산은 정해진 보조율에 따라 정부와 지방정부가 매칭하여 부담
-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비의 지출 부담률 변화를 보면, 국비보다 시·도비의 부담이 더 크게 증가
 - 2013년 전국 평균 국비 부담률은 52.7%, 시·도 부담률은 26%, 시·군·구 부담률은 21.3%로 정부가 가장 많이 부담
 - 2013년 서울시의 국비 부담률은 36%, 서울시 부담률은 44.2%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매우 적은 상황
 - 서울시 부담률은 2008년 37.1%에서 2013년 44.2%로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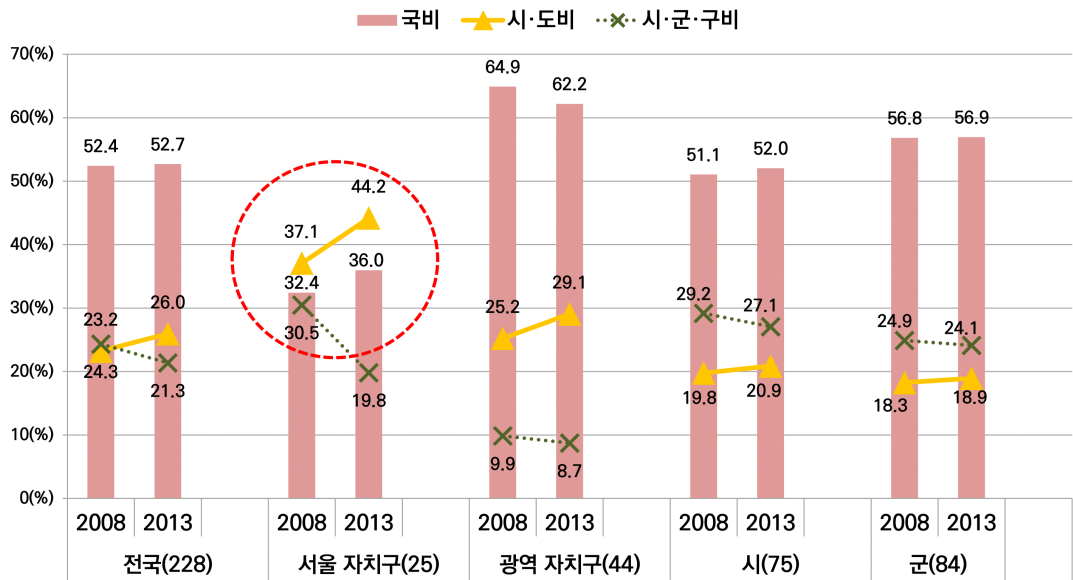


그림 3. 국고보조사업 내 국비-시·도비-시·군·구비 비중 변화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4년)

II. 서울시 자치구의 복지재정 실태

서울시 자치구 전체 예산 중 50% 이상이 사회복지사업에 지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51.5%, 3개 자치구는 60%가 넘어

- 서울시 본청의 사회복지지출은 2008~2015년의 7년간 3조 5,175억 원(134.7%) 증가했고, 25개 자치구 사회복지지출은 평균 1,273억 원(153.9%) 증가
- 서울시 본청의 사회복지지출이 2008년 2조 6,122억 원에서 2015년 6조 1,297억 원으로 134.7% 증가하여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지출이 33.6%를 차지
- 25개 자치구의 사회복지지출은 평균 827억 원에서 2,100억 원으로 153.9% 늘어 서울시 본청보다 자치구가 더 빠르게 증가
- 자치구 평균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51.5%이고, 노원구·강서구·은평구는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사회복지사업에 지출

표 2. 서울 본청 및 자치구의 사회복지지출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전체세출액			사회복지지출				
	2008	2015	증감률	2008		2015		증감률
	금액	금액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본청	132,930	182,578	37.3	26,122	19.7	61,297	33.6	134.7
자치구 평균	2,579	4,081	58.2	827	32.1	2,100	51.5	153.9

주. 일반회계(당초예산) 기준, 예산 규모는 총계기준

자료: 각 연도 알기 쉬운 서울시 예산, 재정고 기능별·회계별 세출예산

사회복지지출이 7년간 226% 늘어난 자치구도 있어

자치구별 사회복지지출 증가속도 차이가 커, 향후 지출 규모의 격차 심화 우려

- 2008~2015년의 7년간 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동구와 은평구
 - 강동구의 사회복지지출은 2008년 677억 원에서 2015년 2,210억 원으로 7년간 3.2배(226.4%), 은평구는 965억 원에서 2,897억 원으로 3배(199.9%) 증가
- 자치구별 사회복지지출 비율과 증가속도 차이가 심해, 시간이 지날수록 자치구 간 사회복지지출 규모의 격차도 커질 것으로 예상
 - 2008년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강서구(45.4%)와 가장 낮은 용산구(19.1%)의 차이는 26.3%였지만, 2015년 노원구(62.3%)와 중구(33.3%)의 차이는 29%로 지출수준의 격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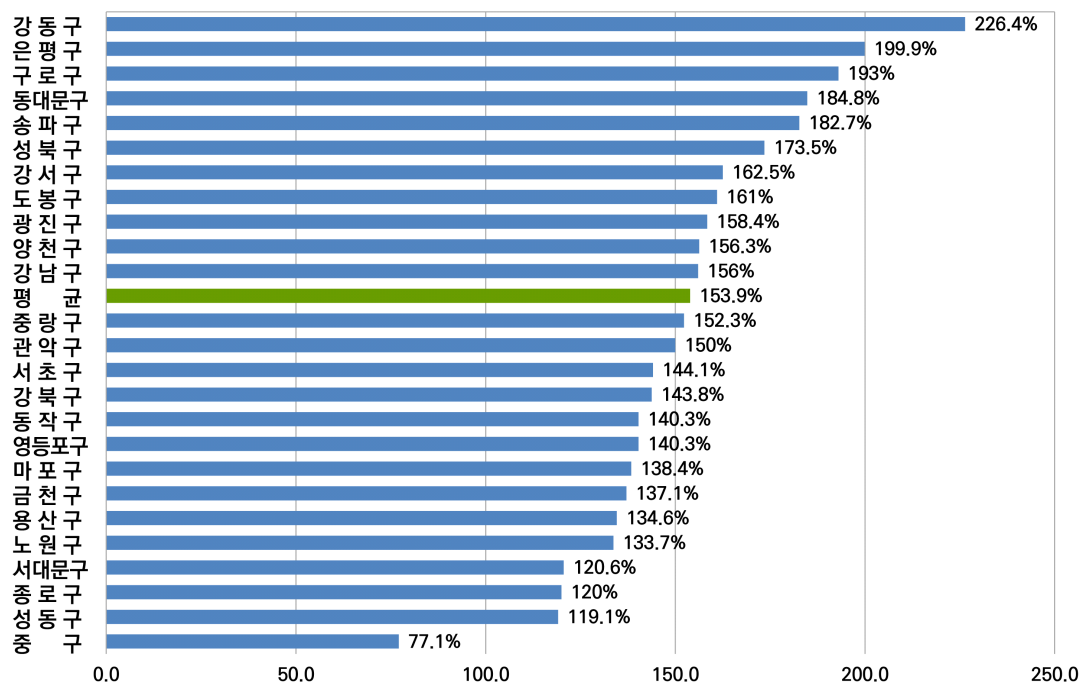


그림 4. 서울 자치구의 사회복지지출 7년간 증감률(2008~2015년)

자료: 각 연도 알기 쉬운 서울시 예산, 재정고 기능별·회계별 세출예산

서울시는 교부금 지원도 없고 국고보조율도 낮아 ‘이중 차등’

낮은 국고보조율 때문에 서울시 자치구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어

- 서울시는 재정력지수가 좋다는 이유로 모든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이 전국기준보다 낮아
 -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기준보조율은 65%이지만 서울시 보조율은 35%이고,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준보조율은 80%이지만 서울시 보조율은 50%
- 서울시는 재정력지수가 높은 편이지만, 지방교부금 등이 포함된 실제 가용재원을 비교하면 다른 지역보다 높지 않은 실정
 - 지방교부금 교부 이전의 재정력지수를 보면, 서울은 1.01로 대구(0.57), 광주(0.58) 등 다른 지역과 큰 격차를 보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 그러나 재정력지수는 지방교부금을 포함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측정해야 더 정확한 비교가 가능
 - 지방교부금을 포함한 실질 재정력지수 측정 결과, 서울은 1.03으로 경기(1.05)보다 낮고, 부산(1.01), 대구(1.00), 광주(0.99), 대전(1.00) 등 다른 대도시와 유사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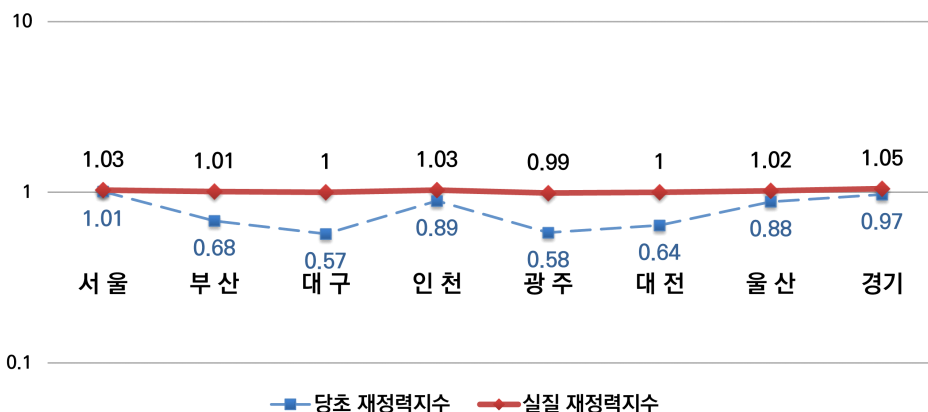


그림 5. 주요 지방정부의 재정력지수 비교(2013년 기준)

주 1. 세로축은 log값

주 2. 실질 재정력지수는 지방교부세 이후의 재정력지수를 의미

자료: 서울 통계(2013년)를 기반으로 재작성

Ⅲ. 서울시 자치구의 복지재정 특성과 유형

복지수요에 대응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서울시 자치구의 복지재정은 위험도·증가도·압박도·자율성 측면에서 대체로 열악

- 자치구가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면서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재정운용이 가능한지 파악하기 위해 ‘위험도’, ‘증가도’, ‘압박도’, ‘자율성’을 측정
- 서울시 자치구 재정특성은 사회복지지출 부담수준이 높아 위험도가 크고, 최근 지출이 증가하는 속도도 빠르며, 높은 부담수준과 빠른 증가로 재정 압박도 심각한 수준
- 사회복지예산을 국고보조사업에 대부분 지출하고 있어 자체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상당히 낮은 편

사용할 수 있는 재원에 비해 복지지출이 많아 재정 위험도가 높은 수준

- 사회복지지출 비율과 일반재원 충당률 두 가지 지표로 ‘위험도’를 분석해 자치구 재원이 사회복지지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파악
-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자치구의 총세입 대비 사회복지지출로 전체 재원이 복지지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
- 일반재원 충당률은 자치구의 일반재원(자체 재원+교부금) 대비 전체 사회복지지출 비율로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사회복지지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파악
- 재원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많을수록 재정 위험도가 크다는 의미
- 노원구·은평구·강서구는 사회복지지출 비율과 일반재원 충당률 모두에서 상위 3순위에 포함되어 복지재정의 위험도가 비교적 큰 편
- 노원구와 강서구는 일반재원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100%를 넘어,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회복지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 종로구·중구·서초구는 사회복지지출 비율과 일반재원 충당률 모두 하위 3순위에 포함되어 복지재정의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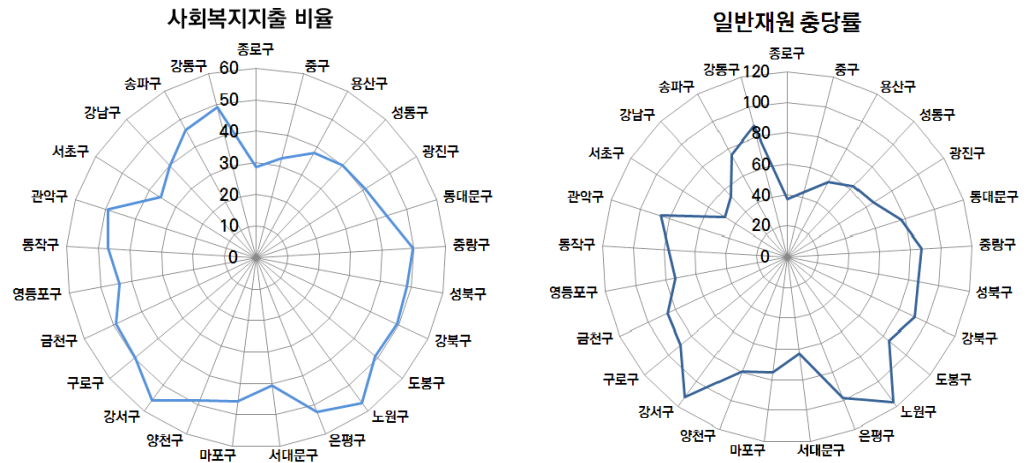


그림 6. 서울시 자치구 복지재정 위험도(2013년)

세입보다 사회복지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재정부담으로 작용

- 사회복지지출 증가는 지역 복지의 확대 측면에는 긍정적이지만, 최근 확대된 재원보다 늘어난 사회복지지출이 더 많아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증대
 - 사회복지지출 증가가 자치구 재정부담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복지지출 증감률’과 ‘총세입 변화 대비 사회복지지출 변화’의 두 가지 지표로 ‘증가도’를 분석
 - 증가도가 클수록 자치구 재정부담이 확대되는 것으로 파악
- 은평구·구로구·강동구는 2008~2013년 5년간 사회복지지출이 연평균 18~22% 증가
 - 이 지역은 사회복지 지출액이 큰 편이 아니지만, 증가속도가 빨라 재정부담이 확대

- 노원구·강서구·은평구는 5년간 사회복지 지출액이 가장 많이 늘었으나 증가율은 낮아
- 5년간 증가액은 노원구가 1,393억 원, 강서구가 1,325억 원, 은평구는 1,217억 원으로 가장 많지만, 기존 지출 규모가 컸던 지역이라 증가율은 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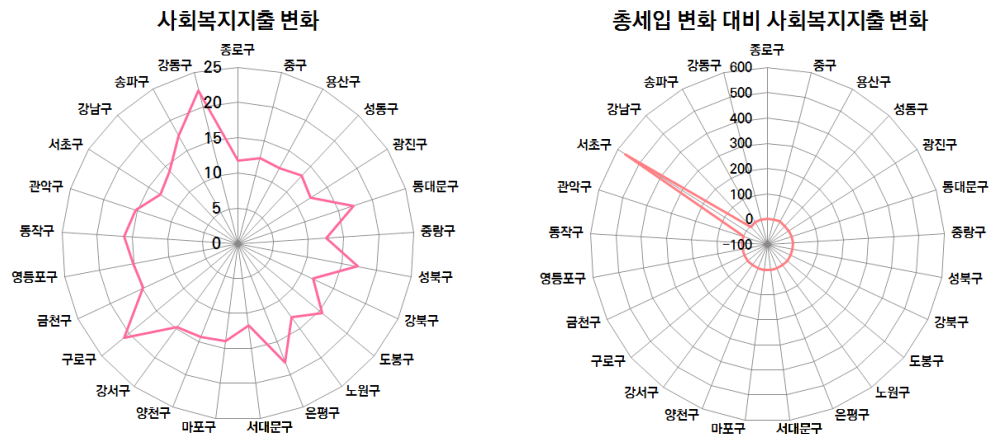


그림 7. 서울시 자치구 복지재정 증가도(2008~2013년)

사회복지지출과 국고보조사업비의 증가로 25개 자치구의 재정 압박도 높아

- 제한된 예산에서 사회복지지출 증가 폭은 커지고 다른 분야의 예산은 경직되거나 줄어드는 상황이 심화될수록 자치구 재정운용에는 압박으로 작용
- 사회복지지출 재정 압박도는 전체 사회복지지출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지출의 증가가 전체 세출에 부담을 주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며, 특정 시점의 사회복지지출 비율과 5년간 증가율로 분석
- 강동구·은평구·구로구의 사회복지지출 재정 압박도가 높은 수준
- 세 곳 모두 2008~2013년의 5년간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20% 이상 증가했으며, 2013년 지출액도 많은 편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재정 압박도는 은평구·노원구·강북구에서 높아
- 은평구와 노원구, 강북구는 복지수요가 큰 지역으로 국고보조사업 지출이 많은 편
- 사회복지사업 중 대부분을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고 있어 국고보조사업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자치구의 재정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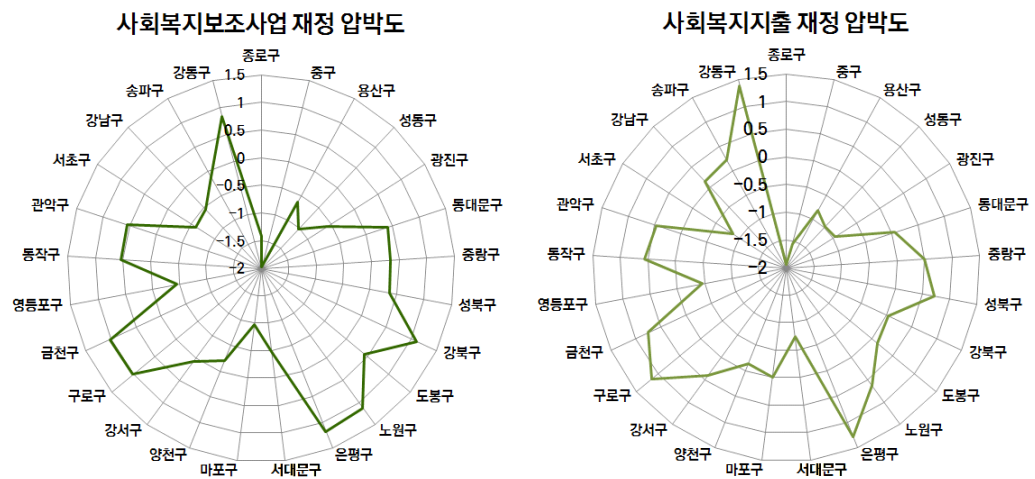


그림 8. 서울시 자치구 복지재정 압박도(2008~2013년)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자치구 사회복지사업은 자율성 위축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자치구 매칭비 부담이 커져서 자치구가 지역의 복지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
- 자치구의 자율적인 사회복지지출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 자체 사회복지지출 비율과 국고보조사업 대비 자체 사회복지지출 비율을 분석
- 일반적으로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의무적 예산이 크게 늘어나면, 재량 지출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자치구의 복지 자율성이 위축

- 동대문구와 중랑구는 자체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3%에 못미쳐 자율성이 매우 낮고, 국고보조사업에 97%의 예산을 지출
- 동대문구의 자체 사회복지지출액은 강남구의 10% 수준에 불과
- 강남구·서초구·중구가 복지재정 자율성이 가장 괜찮은 편
-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복지수요가 크지 않으면서 국고보조사업의 지출 부담이 적고 재정적 여력이 있어 자체 사회복지지출은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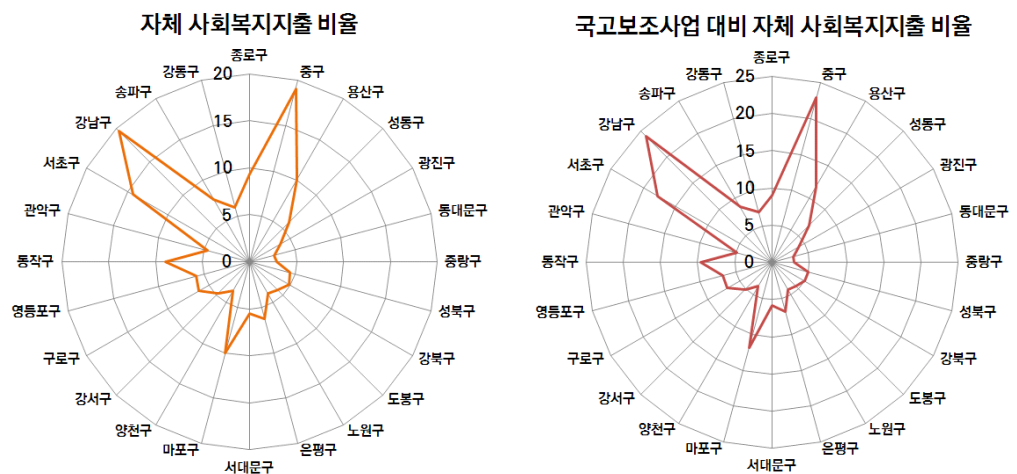


그림 9. 서울시 자치구 복지재정 자율성(2013년)

지역 여건에 따라 자치구별 복지재정의 특성이 달라

복지수요, 재정능력, 자율성에 따라 25개 자치구의 복지재정 특성을 4가지로 유형화

- 복지재정 특성은 지역의 복지수요와 재정력 등 다양한 요인으로 차이가 발생
 - 재정상태가 좋은 지역과 열악한 지역, 복지수요가 높은 지역과 복지수요가 낮은 지역을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움
 - 이에 따라, 복지수요·재정능력·자율성에 따라 자치구 복지재정 특성을 분류한 결과 다음 4가지로 유형화
 - 유형Ⅰ. 높은 수요·재정열악·의무지출형
 - 유형Ⅱ. 높은 수요·재정능력·자율지출형
 - 유형Ⅲ. 높은 수요·재정억제·자율지출형
 - 유형Ⅳ. 낮은 수요·재정능력·의무지출형

유형Ⅰ. 높은 수요·재정열악·의무지출형

- 서울시 자치구의 절반에 가까운 11개 자치구가 유형Ⅰ에 해당
 - 유형Ⅰ 자치구: 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은평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관악구
 - 사회복지 대상자 수가 많은 편이고, 자체 재정능력이 열악하며, 국고보조사업의 비중이 높은 특성
 -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높아 재정 위험도가 높고 사회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지출로 인한 재정압박 수준이 높은 특성
- 유형Ⅰ에 우선적인 재정위기 해법 모색이 필요

유형Ⅱ. 높은 수요·재정능력·자율지출형

- 3개 자치구(서초구, 강남구, 중구)
- 비교적 사회복지 대상자 수가 많지만, 자체 재정능력이 좋고 상대적으로 자체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높은 특성
-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낮아 재정 안정성이 좋은 편이고 사회복지지출 증가가 빠르지 않으며, 사회복지지출로 인한 재정압박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특성

유형Ⅲ. 높은 수요·재정억제·자율지출형

- 5개 자치구(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송파구, 강동구)
- 자체 재정능력이 열악한 편은 아니지만 비교적 억제적이며, 사회복지 대상자 수가 많고 자체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높은 특성
- 사회복지지출이 전체 평균수준으로 복지재정의 안정성은 유지하지만, 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이 평균보다 약간 높은 추세
- 사회복지지출로 인한 재정압박 수준도 평균보다 약간 높지만, 사회복지지출의 자율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편
- 재정력은 평균수준인데 복지수요가 높기 때문에, 최근 지출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유형Ⅳ. 낮은수요·재정능력·의무지출형

- 5개 자치구(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서대문구)
- 다른 지역에 비해 사회복지 대상자 수가 적고 자체 재정능력도 좋은 편이지만, 국고 보조사업 비중이 비교적 높은 특성

- 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이 평균보다 약간 낮고, 사회복지지출로 인한 재정압박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사회복지재정이 비교적 안정적
- 그러나 자체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낮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의무지출이 큰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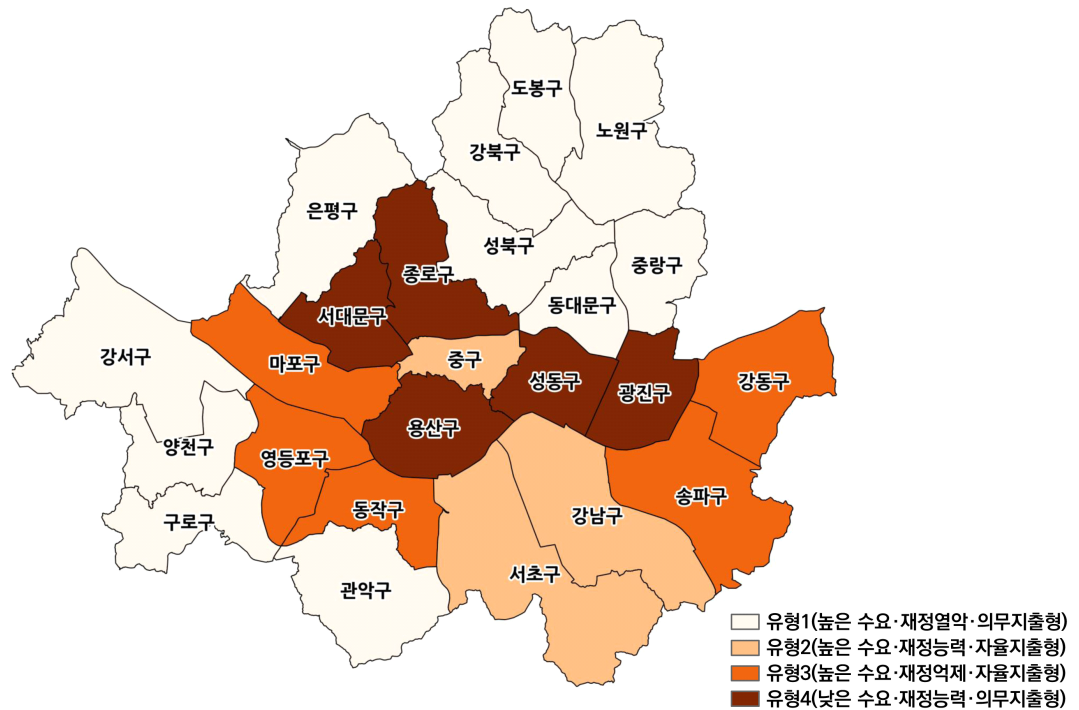


그림 10. 서울시 자치구 복지재정 유형화

V. 정책제언

복지재정 문제,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해법 찾아야

큰 틀에서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쟁점과 과제 조망이 필요

- 현재 지방정부가 직면한 복지재정 문제는 개별적 해결 모색이 쉽지 않은 상황
- 사회복지와 관련된 재정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와 다른 분야의 세입-세출 문제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
- 일시적인 재정지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쟁점과 과제를 조망할 필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재정의 책임분담을 명확하게 구분
-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의 적정화
- 국가책임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한편, 자치구 재정특성을 반영한 차등보조율 적용은 확대
- 서울시 재정분석제도 도입으로 복지재정 감시시스템 마련

주요 추진전략

주요 과제	추진전략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재정의 책임을 설정	- 중앙·지방정부 간 사회복지사무와 재정 분담의 기준을 마련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의 적정화	- 국가책임 복지사업은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 - 서울시의 국고보조율을 우선 조정 - 자치구 재정특성을 반영한 차등보조율을 확대 적용
서울시 재정분석제도 도입으로 복지재정 감시시스템을 마련	- '서울시 재정분석제도' 도입이 필요 - '복지재정 감시신호등' 시스템을 마련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재정의 책임을 설정

중앙·지방정부 간 사회복지사무와 재정 분담의 기준을 마련

- 사회복지 재정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회복지 사무와 재정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
- 정부책임 사업은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고, 지방책임 사업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책임분담을 구분할 필요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의 적정화

국가책임 복지사업은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

-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을 적극 확대하면서 낮은 국고보조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지방 복지재정 문제의 가장 큰 핵심
-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국고보조사업 중 명백하게 국가사무이거나 국가정책 수립과 연계된 사업을 중심으로 국고보조율의 상향 조정 필요

서울시의 국고보조율을 우선 조정

- 서울시는 재정력이 좋다는 이유로 국고보조율을 차등 적용받고 있지만, 실제 사회복지사업에 지출하는 실질재정력은 다른 지역과 거의 비슷한 수준
- 서울시에는 보통교부금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국고보조율마저 차등 적용하여 서울시와 자치구들의 사회복지 재정부담 심각

-
- 서울시의 국고보조율을 우선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

자치구 재정특성을 반영한 차등보조율을 확대 적용

- 자치구의 복지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 차등보조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차등보조 지표의 개선이 필요
- 현재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보육료 지원사업은 지역의 복지수요와 재정능력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3단계(+10%, -10%, 유지)의 차등보조율을 적용
- 기준에 근접해도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턱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차등보조비율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할 필요
- 차등보조율 범위를 $\pm 20\%$ 수준으로 확대하여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 차등보조 지표인 사회보장비 지수, 노인인구비율, 재정자주도는 각 복지사업과 상관관계가 약하거나 차등보조 효과가 없다는 지적 존재
- 자치구의 인구구조, 재정력, 복지수요 증가, 재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의 실질 수요를 반영한 지표개선 필요

서울시 재정분석제도 도입으로 복지재정 감시시스템을 마련

‘서울시 재정분석제도’ 도입이 필요

- 자치구의 재정상태를 진단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정분석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재정분석제도’ 도입이 필요
- 자치구에서 스스로 재정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재정분석 지표개발 및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재정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복지재정 감시신호등’ 시스템을 마련

- 복지재정 감시신호등 시스템을 통해 자치구 재정상태 진단
- 재정분석 지표에 따라 자치구들의 재정상태를 진단하고, ‘재정건전 및 지속가능’ 단계, ‘재정압박 경고’ 단계, ‘재정위험 및 격차 심각’ 단계 등으로 위험 수준을 단계별로 파악
- 단계별 대응방안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객관적인 재정분석을 근거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재정분석 방식과 결과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모색